2022년 8월 15일
제22호

동북아역사 리포트

NORTHEAST ASIAN HISTORY REPORT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정재정(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균형 잡힌 시각에서 현대 한일관계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 속에서 상생공영(相生共榮)의 교훈과 지혜를 찾아야 한다. 이런 역사관을 성찰사관(省察史觀)이라 할 수 있다. 성찰사관에 서서 현대 한일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야말로 한일 사이의 역사관의 충돌로 인한 싸움을 완화하는 지름길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정재정(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1. 한일의 '냉전'- 현대사 성찰에서 극복의 지혜를

금년은 광복 77주년이다. 사람의 나이에 비하면 희수(喜壽)에 해당한다. 그런데 2012년 이래 나빠진 한일관계가 희수를 맞는 날까지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2017년 이후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돼 서로 성역으로 여겨온 경제와 안보 이익까지 침해하는 사태를 맞았다.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 학자이자 한일관계 전문가인 빅터 차(Victor Cha)는 한국과 일본의 소모전 양상을 튜닝이 안되는 부서진 악기에 비유한다. 한국의 외교관으로 주일대사를 역임한 신각수는 한일관계가 다중복합골절(多重複合骨折)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한다. 한마디로 한국과 일본은 역사문제를 빌미로 '냉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역사문제를 둘러싼 한일의 갈등과 대립이 '냉전'을 불러온 직접 원인이지만, 그 기저에는 역사관의 충돌 곧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싸움이 깔려 있다. 따라서 눈앞의 현안(懸案)을 해결한다고 해서 한일관계가 온전히 개선되지는 않는다. 역사관의 충돌 곧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싸움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는 그 방법의 하나로 현대 한일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 곧 호혜적(互惠的) '현대 한일관계사상(韓日關係史像)'의 수립을 제안한다. 한국과 일본의 현대 한일관계 인식에는 착각과 오류, 선입관과 편향성이 적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일반론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중엽까지의 상호관계에 대해 상반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침략과 지배로 근대국가 건설에 실패하고 민족차별의 고통과 치욕을 맛보았다고 여긴다. 일본은 한국을 유린한 일은 미안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었으며 근대문명을 전파한 측면도 있다고 여긴다. '한일 근대사관(近代史觀)'의 이런 괴리와 대립이 지금까지도 역사문제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근대 한일관계사에 대한 연구는 셀 수도 없이 많고 끊임없이 논의를 되풀이한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한일 현대사관(現代史觀)'에 관한 연구나 언설은 거의 없다. 기간으로 보아도 현대 한일관계가 근대 한일관계보다 더 길어졌는데도 말이다.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현대 한일관계를 총괄해보는 게 마땅하다. 현대 한일관계사를 제대로 정리하면 근대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2,500년 이상에 걸친 한일관계의 역사상(歷史像)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나는 이런 문제의식 아래 지금부터 현대 한일관계의 흐름을 살펴보겠다.

한일관계의 역사는 파란만장하기 때문에 어느 한 면만을 도드라지게 보아서는 전체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또 한일의 역사를 말할 때는 감정에 들뜨기 쉬워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틀린 것을 맞는 것처럼 확신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다루려는 현대 한일관계만 하더라도, 국제관계 속에서 장기적·거시적으로 파악해야만 참모습을 그려낼 수 있다.

그런데도 지금 현대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잘못으로 점철되어 폐단만 쌓였다는 언설이 난무한다. 나는 이런 역사관을 적폐사관(積弊史觀)이라 부른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 한일관계를 잘 한 일이 가득한 성공의 역사로만 봐서도 안 된다. 성공 일변도의 역사관은 성취사관(成就史觀)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현대 한일관계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 속에서 상생공영(相生共榮)의 교훈과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역사관을 성찰사관(省察史觀)이라 부르겠다. 성찰사관에 서서 현대 한일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야말로 '냉전'의 동인인 역사관의 충돌 곧 아이덴티티의 싸움을 완화하는 지름길이다.

2. 현대 한일관계의 추세 - 시기별 특성

성찰사관에 서서 지난 77년의 한일관계를 부감(俯瞰)하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한마디로 국력, 정치체제, 생활수준, 가치관, 문화, 소프트파워 등이 수직·비대칭·불균등·불균질 관계에서 수평·대칭·균등·균질 관계로 수렴·진화한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한일관계는 제1기(1945~1965년), 제2기(1965~1991년), 제3기(1991~2011년), 제4기(2011~2022년)로 나눠볼 수 있다. 역사의 모든 시기 구분이 그렇듯이, 각 연도에서 딱 끊어진다기보다는 대체로 그 언저리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선명해졌다고 보면 좋겠다. 각 시기 한일관계의 특징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기(1945~1965년)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종결과 더불어 한국은 일본에서 해방되었다. 양국은 미국의 점령을 거친 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기초한 독립 국가를 수립했다. 반면에 북한과 중국은 소련의 강력한 지원 아래 공산주의와 통제경제 체제를 도입했다. 이로써 1948년부터 1949년을 전후해 동아시아에서 적대적인 두 개 문명이 사활을 걸고 각축을 벌이는 국제질서가 구축되었다. 이런 국내외 사정은 이후 한일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틀로 작용했다.

한국은 1949년 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와 외교관계를 담당하는 주일대표부를 도쿄에 설치하고, 일본과 한일통상협정을 체결했다. 일본과의 공무역은 미미했고 밀무역이 성했다. 패전·해방 후 2년 사이에 상대방의 나라에 거주하던 각각 100만여 명의 국민이 재산을 거의 다 남겨둔 채 조국으로 귀환했다.

한국은 6·25전쟁을 치르며 인명 손실은 물론이고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 반면 일본은 후방 기지의 특수를 누려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고도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일본은

1951년 미일안전보장조약, 한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었다. 미국은 한국을 반공의 방파제, 일본을 반공의 주축으로 삼고, 한일의 군사·경제 분업관계 수립을 꾀했다. 한국은 일본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체제 구축을 지향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보장을 요구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후 반일과 반공의 기치를 선명히 내세웠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은 1952년 4월 일본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체결해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처리를 마무리했다. 일본의 배상을 면제하고 부흥을 지원하는 관대한 내용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틀 속에서 14년 동안 수교회담을 벌였다. 이른바 한일회담이다. 한일회담은 식민지 지배에서 야기된 역사인식과 배상문제 등을 둘러싼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했다. 한국에서 정권 교체와 일본에서 정계 재편이 이루어진 가운데 1965년 6월 기본조약과 4개 부속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단절되었던 한일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되었다.

한일 기본조약에서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은 물론이고 사죄와 반성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청구권과 경제협력'을 규정한 부속협정에서 일본이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 상업차관 1억불 상당을 물자와 용역으로 10년에 걸쳐 한국에 지불한다고 규정했다. 전승국도 아닌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얻어내기는 어려웠다. 국제사회도 식민지 지배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부는 도탄에 빠진 민생고를 해결하고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일본의 경제협력을 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했다. 일본 자유민주당 정부는 경제협력을 통해 한국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지속하려고 했다. 한미일은 반공의 보루인 한국의 경제 발전과 정치 안정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따라서 한일협정을 통한 국교 재개 곧 '1965년 체제'는 경제협력과 안전보장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역사문제의 청산은 뒤로 밀려 화근(禍根)을 남겼다.

나. 제2기(1965~1991년)

한국과 일본은 한일협정을 체결해 대등한 국가로서 국교를 재개했다. 한국은 '청구권 자금'을 토대로 경제발전을 추진했다. 일본의 부품·소재·장비를 수입해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공업화 전략을 구사했다. 그리고 고속도로·다목적댐·지하철 등의 사회기반시설과 포항종합제철 등 중화학공업을 육성했다. 농업과 어업의 기반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일본 기업은 한국에 재화·기술·용역 등을 제공해 떼돈을 벌었다. 청구권자금이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을 촉진했다. 한국은 1970년대에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신흥공업국가의 선두에 나섰다. 그럴수록 일본에서 수입하는 부품·소재·장비는 더욱 늘어나 만성적인 무역 적자에 시달렸다. 한일 간에 이른바 수직적 분업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한일 간의 경제·안보 협력을 추진한 실체는 한국의 박정희 정부와 일본의 자민당 정부였다. 특히 박정희 정부는 일본을 활용해 일본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반일(反日)보다는 용일(用日)·극일(克日) 내셔널리즘을 지향했다. 그리하여 한일 국교 재개 이래 베트남전쟁·중일수교·미중수교 등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김대중 납치·박정희 저격 등 대형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는 기본적으로 양호했다.

1970년대 한국과 일본은 국력·민주주의 등에서 격차가 심했는데도 정치·경제 분야에서는 유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친근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렇지만 민간 레벨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 한국은 아직 자유롭게 외국을 여행할 처지가 못 되었다. 반면에 일본 남성들의 '기생관광'('매춘관광')이 물의(物議)를 빚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해 한국에서는 원한, 일본에서는 무관심이 주류를 이루었다. 1970년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주체적으로 협력관계를 형성했다.

1980년대 초 미국과 소련이 군비경쟁에 돌입해 냉전 분위기가 세계를 감쌌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경협'을 고리로 이른바 '한일 신시대'를 구축했다. 한국 정부는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 일본에 '안보비용'의 명목으로 경제협력을 요구했다. 일본은 동북아의 안정을 바라는 미국의 의향도 참작해 한국에 4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다. 한미일은 1970년대에 약간 흐트러졌던 공조체제를 다시 강화했다.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용일(用日)·극일(克日) 내셔널리즘을 유지했다.

한국은 1980년대 후반 저금리·저유가·저환율 등을 활용해 미증유의 경제성장과 무역수지 개선을 이룩했다. 그럼에도 대일 무역 적자 폭은 더욱 늘었다. 〈일본(자본집약형 부품·소재) - 한국(노동집약형 조립) - 미국·유럽·일본에 최종재 수출〉이라는 가공무역의 한계였다. 일본은 한국의 기술이전 요구를 받아들여 중소기업에 연수 기회를 제공했다. 경제관계에서 수직적 분업 구조가 여전한 가운데 한국이 철강·조선·자동차·전자 등의 업종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 못지않게 정치·외교·문화 등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공산주의 세력권에 외교 지평을 넓힘으로써 서울올림픽대회를 '벽을 넘어선 세계인의 축제'로 승화시켰다. 아름답게 현대화된 서울의 모습은 세계에 생중계돼 6·25전쟁의 폐허라는 한국의 이미지를 일거에 개선했다. 때마침 한국은 민주주의를 쟁취해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룩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량과 위상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한국을 바라보는 일본인의 시각과 인상도 바뀌기 시작했다. 한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평화·안보를 함께 누리는 국가로 받아들인 것이다. 때마침 일본은 경제발전이 정점에 이르러 정신적 여유가 생겨 아시아를 시야에 넣은 국제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정치·사회·문화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수평·대칭 관계로 옮아가는 조짐을 보였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총리가 1983년 1월 취임 후 첫 순방국으로 선택한 곳은 한국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4년 9월 일본을 국빈 방문했다. 일본 천황은 "금세기의 한 시기에 양국 간에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것은 대단히 유감이며 다시는 되풀이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사죄를 표명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역사인식이 한국을 배려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징조였다. 1980년대 한일관계는 미국이 깊이 관여했다는 점에서 1960년대와 유사한 양상을 띠었다.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 50%를 넘어 민간 교류 확대 가능성을 예고했다.

다. 제3기(1991~2011년)

1991년 여름부터 한국과 일본은 수직적·비대칭적 관계에서 점차 수평적·대칭적 단계로 옮겨갔다. 한국이 일본에서 소재와 설비를 도입해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무역구조는 여전했지만, 자본과 기술에서 일본 의존도는 현저히 낮아졌다. 한국의 자본·기술 축적과 중국 시장의 등장으로 물자의 순환은 〈일본(기술집약형 고기능 부품·소재) - 한국(자본집약형 부품·소재) - 중국(노동집약형 조립) - 미국·유럽·일본·한국에 최종재 수출〉이라는 구조로 바뀌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대일 무역 적자 폭도 증가하는 구조는 여전했다. 한국과 일본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술·통화 협력을 확대했다. 정부보다는 민간이 앞장섰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하고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벗어났다. 그렇지만 곧 외환위기를 맞아 경제 파탄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은 민관의 일치단결과 분투노력 아래 구조개혁에 나서 2년여 만에 외환위기에서 탈출했다. 일본은 한국에 외화를 지원하는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기사회생(起死回生)한 한국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했다.

한국의 대일 무역의존도는 1965년 수출 25.5%, 수입 37.8%이었는데, 2012년 수출 7.1%, 수입 12.4%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또한 한국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일본 기업을 제치거나, 한일합작으로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스포츠와 예술 등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쌍방향 교류가 활발해졌다. 1998년 이후 한국이 일본 대중문화 유입을 개방함에 따라 만화·영화 등의 수입이 늘고, 역으로 한국 대중문화의 일본 수출도 증가했다.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서 공전(空前)의 인기를 끌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왕래도 빈번해졌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때는 상대팀을 응원하는 분위기도 나타났다. 한류(韓流)와 일류(日流)에서 보듯이, 두 나라 국민의 생활과 문화에서 상당한 접근이 이뤄졌다.

1990년 무렵 소련 해체와 독일 통일 및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 등으로 세계가 냉전에서 벗어나자 한국과 일본의 반공연대는 약화됐다. 한국은 중국·러시아와 국교를 맺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실현했다. 남북고위급회담(1990~1992년)을 추진해 남북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모색하고, 남북 쌍방의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1993년 제1차 핵위기가 발생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미국과 함께 북한에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도발로 중단했다(1995~2006년). 북한 비핵화를 논의하는 6자협의에도 함께 참여했으나 성과 없이 끝났다(2003~2008년).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는 2002년 9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경제협력 방식으로 조일수교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일 국교정상화와 유사한 방안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건이 걸림돌이 돼 조일수교는 시작 단계에서 좌초했다. 이후 납치된 일본인 송환 문제는 일본 북한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납치 문제는 일본 사회에 피해자 의식을 확산했다.

1990년대 들어 한국에서는 정치 민주화와 사회 다원화가 괄목할 만하게 진전돼, 권위주의 시대에 억눌렸던 반일 내셔널리즘이 분출했다. 일본에서는 자민당 집권 체제를 대신한 야당 연립정권이 출현하고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반성의 기운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1991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공론화와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 발표,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총리의 침략전쟁 인정과 식민지 지배 사죄,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 담화 발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설립, 19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01년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발생,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과 노무현 대통령 외교전쟁도 불사한다는 결의 천명, 2006년 역사수정주의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2010년 민주당 정부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한국병합 100주년 담화 등이 줄을 이었다. 잠복했던 역사문제가 한일의 중요 현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양국 정부는 외교교섭이나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역사문제를 관리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다. 사죄와 반성 표명이 일절 없었던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진전이었다. 한발 더 나가, 민주당 간 총리는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발표한 담화에서 "3·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군사적 배경하에서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로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한국강제병합'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는 원칙상 합법·정당·유효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 이래 사죄·반성을 표명함으로써 합법·부당·유효로 바뀐 듯한 인상을 주었다. 간 총리는 여기에 식민지 지배의 강제성을 언급함으로써 합법에 의문을 제기했다. 간 담화는 한일 간 역사인식의 수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곧이어 등장한 자민당 아베 정부는 이를 뒤집는 역사인식을 자주 표명했다. 일본 국민의 여론도 역사·영토 문제에서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로 기울었다. 한일관계의 파란을 예고하는 징조였다.

라. 제4기(2011~2022년)

한국과 일본은 2010년대 들어 수평적·대칭적·균등적·균질적 관계에 성큼 다가섰다. 경제 규모를 살펴보면, 1965년 한국의 국민총생산액은 31억 달러로, 일본 960억 달러의 3.2%였다. 일본이 한국의 31배였다. 2014년 한국의 그것은 1조 4,100억 달러로, 일본 4조 6,723억 달러의 30.2%가 됐다. 일본이 한국의 3.3배였다. 그동안 한국의 국민총생산액은 455배, 일본은 49배 늘어났다. 일본의 경제 규모도 많이 커졌지만 한국의 팽창이 훨씬 더 두드러졌다. 2014년에는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4위, 일본은 5위를 차지해, 한국이 일본을 처음 앞섰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1인당 GDP에서 2017년에 한국은 4만 1,001달러, 일본은 4만 827달러로, 국민의 생활 수준에서도 한국이 약간 높았다.

한국과 일본의 물자 교역량은 늘어나는데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1965년 한국의 수출액은 1억 8,000만 달러로 일본의 비중이 26%였는데, 2014년에는 각각 5,726억 달러와 6%로 바뀌었다. 1965년 일본의 수출액은 84억 달러로 한국의 비중이 2%였는데 2014년은 각각 6,961억 달러와 7%가 됐다. 한국과 일본의 수출액은 각각 3,181배와 83배 늘어났다. 한국의 주요 상대국 수출 비율을 보면, 1990년에 일본 19.4%, 미국 29.8%, 중국 0.9%였는데, 2020년에 일본 4.9%, 미국 14.5%, 중국 25.8%로 바뀌었다. 한국에서 일본의 비중은 낮아진 반면에 일본에서 한국의 비중은 높아졌다. 2010년대 들어 한일의 직접 교역이 감소함에 따라 한국의 대일 무역 적자 폭은 감소했다.

경제 이외의 분야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거의 수평·대칭·균등·균질 관계를 구축했다. 양국은 군사력(예산 규모), 소프트파워, 규범을 설정하는 능력, 문화·학술의 매력, 세계에 발신하는 능력 등에서 균형을 이룬다. 영화, K-POP 등에서는 한국이 앞서는 경우도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평화 등을 공유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한마디로 한국과 일본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체제와 가치에서 균등화·균질화를 이룩했다.

이에 따라 한일 간의 교류와 협력도 다층화·다양화되었다. 교류 주체가 정부에서 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산되고, 일본 주도의 일방향이 아니라 대등한 쌍방향으로 바뀌었다. 1990년대 이전 일본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낮고, 한국의 일본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1965년 5천 명, 2014년 228만 명, 2018년 753만 명이었다. 같은 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각각 1만 7천 명, 275만 명, 295만 명이었다. 2018년에는 한국인의 방일자수가 격증해 일본인의 방한자수보다 2.6배나 많았다. 역전 현상이 완연했다. 한류(韓流)와 일류(日流)가 다시 번져, 양국 국민이 상대국을 방문하거나 상대방 문화를 소비하는 일은 일상이 되었다.

한일관계가 수평화·대칭화·균등화·균질화하면 상대방에 대한 견제와 경쟁이 치열해지기 마련이다. 한국과 일본은 요즘 모든 영역에서 우위 다툼을 벌인다. 이러다보니 한국을 낮게 보던 일본인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초조감을 느낀다. 일본을 높게 보던 한국인은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고 자신감을 느낀다.

한국과 일본의 위상 변동은 종종 혐오감·투쟁심으로 연결된다. 특히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직결된 역사문제에서는 자신이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대결 의식을 부추긴다. 종래는 한국이 그런 편이었는데 요즘은 일본이 더욱 심하다. 일본은 이전에 한국의 주장을 그대로 들어주고 반박하지 않아 수세에 몰렸다는 인식 아래 한국의 주장에 직설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한다. 타협적 유연 노선보다 비타협적 강경 노선으로 선회한 것이다. 그리하여 2010년대에 들어 한국과 일본은 역사, 영토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노골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2010년대 한일 역사 갈등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천황의 사죄를 언급하자, 일본은 맹렬히 반발했다. 박근혜 정부는 아베 정부와 오랜 현안인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합의하고 '화해·치유 재단'을 설립했다.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화해·치유 재단'을 해산하자 일본은 국가 간 약속을 지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국 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피해자는 관련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를 추

진했다. 일본은 한국이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를 끄집어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관리 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은 이에 맞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중단을 선언했고 일부 시민들은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자발적으로 벌였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문제를 다루는 기본자세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국은 '이행기 정의'라는 관점에서 약자·피해자를 포함한 관계자가 납득하고 동의하는 구제를 정의로 보고,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해서라도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일본은 약자·피해자 구제는 법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거나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절차상의 정의'를 중시한다. 한국은 이전 정부가 외국과 맺은 조약이나 약속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무시 또는 파기해도 좋다고 본다. 일본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일 간 정의관의 괴리가 이렇게 심하니 역사문제가 쉽게 해결될 리 없다.

한국과 일본은 2017년 이후 역사적 아이덴티티의 충돌이 경제·안보 영역까지 침범하는 미증유(未曾有)의 사태를 맞았다. 게다가 양국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이나 북한, 중국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차이와 괴리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다가서기 위해 한미동맹을 축소하려 했고, 아베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확대하려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아베 정부는 대북 압박 강화에 중점을 뒀다. 근린제국과 관련한 외교정책에서 나타난 양국 정부의 차이와 괴리는 상호 불신과 대립을 깊게 해 역사 갈등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갔다.

3. 한일관계의 비전 – 선의의 경쟁과 공통 이익의 확대

한국과 일본은 잦은 마찰과 충돌에도 불구하고 분리 독립 77년, 국교 재개 57년 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풍요, 인권, 평화 등을 함께 누리는 동질의 국가·문명을 건설했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자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안전과 번영을 이끄는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지금 양국 국민은 비슷한 수준의 생활과 문화를 영위하기에 이르렀다. 양국이 이런 성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하면 세계 문명의 발전에 훨씬 더 기여할 것이다.

인생 칠십 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나, 종심소욕 불유구(從心所欲 不踰矩)라는 옛말이 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70정도 오래 살다보면 산전수전(山戰水戰) 다 겪고 세상 이치를 깨달아 마음대로 행동해도 규범이나 법도를 어길 게 없다는 뜻으로 풀 수 있다. 너그럽고 의젓하고 떳떳하게 베풀고 받아주는 경지일 것이다. 현대 한일관계도 70을 훌쩍 넘겨 희수(喜壽)를 맞았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옛말의 참뜻을 헤아려 상호 관계를 새롭게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 앞에서 개관한 현대 한일관계의 궤적이 방향을 잡는 키가 될 것이다.

한일 사이에 역사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양국 관계의 모든 부문을 좌지우지하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사안이라고는 볼 수 없다. 양국은 역사문제와 씨름하면서도 선의의 경쟁을 펼쳐 양질의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 경쟁에서는 상대방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서로 손을 잡아주는 상생(相生)의 자세가 필요하다. 나아가 양국은 선진국으로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환경, 기후, 질병, 빈곤, 인권, 평화 등 함께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다. 교류·협력을 계속하다 보면 공통 이익을 누리는 영역도 점점 더 넓어질 것이다.

게다가 지금 한국과 일본은 공통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의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전보장, 글로벌 경제, 민주주의 등 양국이 공유해온 체제와 가치가 근본에서부터 재편·붕괴·약화되는 비상 상황을 맞고 있다. 양국이 체제와 가치를 공유하며 발전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교류와 협력, 경쟁과 연대를 통해 이런 난제(難題)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 역사문제에만 얽매이다가는 세계사적 대전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뒤처지게 될 것이다.

끝으로 저명한 문명학자 재레드 다이아몬드(Jared Mason Diamond)의 화제작 『총, 균, 쇠』에 들어 있는 논문 「일본인의 뿌리」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겠다.

"역사는 한일 양 국민들에게 상호 불신과 증오의 여지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결론을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아랍인과 유대인처럼 한국인과 일본인은 핏줄이 이어져 있지만, 서로 오랜 전통적인 상호 적대적 감정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대립과 갈등은 상호 간에 파괴적일 뿐 이로울 건 아무것도 없다. 분명히 한일 양국 국민들은 유년기를 함께 지낸 '쌍둥이 형제'와 같다. 이제 동아시아의 정치적 미래는 그들 사이의 오랜 유대를 성공적으로 재발견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참고문헌>

- 재레드 다이아먼드 저, 김진준 역, 1998,『총, 균, 쇠』, 문학사상사.
- 정재정, 2014,『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20세기 한일관계사』, 역사비평사.
- 정재정, 2015,『한일회담 · 한일협정, 그 후의 한일관계』, 동북아역사재단.
- 신각수 엮음, 한일비전포럼 지음, 2021,『복합 대전환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찾아서』,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한일비전포럼.
- 木宮正史, 2021,『日韓關係史』, 岩波書店.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제2호) 시진핑 시기 혐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제4호) 중국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비판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